

현안과 과제

경제고통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 요약 >

최근 경제고통지수의 추이와 비교

■ 최근 한국의 경제고통지수,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 2011년(1~8월)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8.1%로 2010년(6.7%) 대비 상승
- 2008년 금융위기(7.8%)보다 높은 수준
- 월간으로는 2011년 5월 7.3%에서 지속 상승하여 8월 8.3%을 기록

■ 단, 현 한국의 경제고통지수 수준은 OECD 분석대상 27개국중 22위로 양호

- PIGS 국가들이 상위 5위권 내 모두 포함
- 스페인(1위 24.2%), 그리스(19.5%), 아일랜드(16.9%), 포르투갈(16.0%) 등

경제고통지수 상승의 원인 및 전망

■ 경제고통지수 상승의 글로벌 원인

- 전 세계적 성장력 저하에 따른 고용 불안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
 - OECD 27개국 실업률 2008년 6.1%에서 2009년 이후 8% 이상 유지
 - 한국의 실업률 2011년 1/4분기까지만 해도 4%대를 기록
- 高원자재가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
 - 2011년 주요 원자재 가격, 2010년 대비 여전히 높은 상승률 지속

■ 경제고통지수 상승의 국내적 원인

-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요인
 -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9월 평균 11%대 상회
 -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도 2011년 1월 4.3%에서 9월 7.7%로 상승
- 인플레이 심리도 물가 상승 가속화에 기여
 -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011년 상승 추세를 지속, 9월 현재 4.3%

■ (전 망) 세계 경제 상황의 추가 악화가 없는 한 고통지수 하락 전망

- 단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 파급될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고통지수,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부진으로 경제고통지수의 상승 가능성도 상존

시 사 점

첫째, 국내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미시적 대응으로 기대 인플레이 심리 안정
 둘째, 관세 인하 및 외환시장 안정을 통한 수입 물가상승 압력 완화
 셋째, 경제 하방 리스크에 의한 고용 악화에 대비하여 내수 활성화에 주력
 넷째, 경기 변동 대응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실질 구매력 확충 노력

1. 최근 경제고통지수¹⁾ 추이와 비교

○ 2000년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

- 2011년(1~8월)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2010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높은 수준

- 경제고통지수는 2008년 월평균 7.8%, 2009년 6.4%, 2010년 6.7%, 2011년(1~8월 평균)에는 다시 8.1%로 재상승중

- 2011년의 경제고통지수 수준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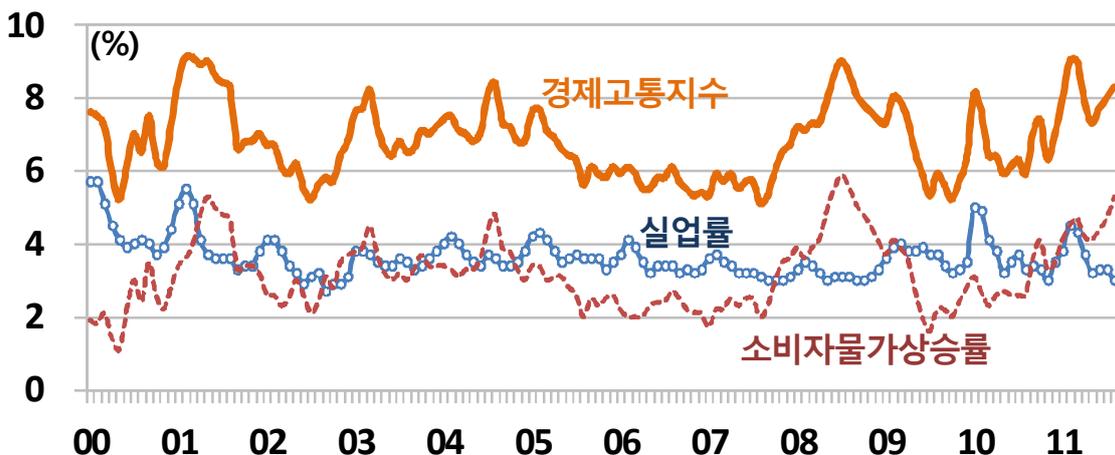
- 2000년 이후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IT 버블 붕괴 시기 2001년의 8.1%와 동일한 수준

- 월 기준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1년 2월 및 3월의 9.1%, 다음으로는 2008년 7월, 2011년 2월 및 3월의 9.0%

- 특히 최근에 들어 경제고통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2011년 5월 7.3%를 저점으로 6월 7.7%, 7월 8.0%에 이어 8월 8.3%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한국의 월별 경제고통지수(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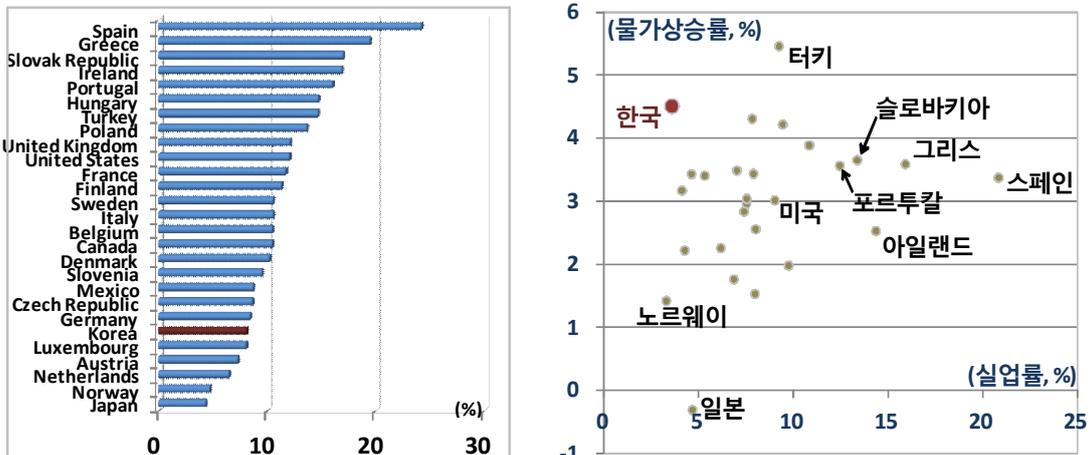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1)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美 브루킹스연구소의 오쿤(Arthur Okun)이 만든 것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합한 값임.

○ 현재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OECD 내에서 양호한 수준

- 2011년 기준 OECD 27개국²⁾중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22위로 양호한 수준
 -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24.2%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그리스(19.5%), 슬로바키아(17.0%), 아일랜드(16.9%), 포르투갈(16.0%) 등으로 상위 5위권 내에 PIGS 국가들이 모두 포함
 - 미국은 12.0%로 10위이며 독일은 8.4%로 21위, 일본은 4.4%로 분석 대상 국가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
 - 한국은 8.1%로 OECD 분석 대상 27개국중 22위를 기록
- 경제고통지수 요인별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지수 상승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노르웨이(3.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
 - 그러나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로 터키(5.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OECD 국별 경제고통지수(2011년)> <OECD 국별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2011년)>



자료: OECD의 'Harmonised unemployment rate' 및 'Consumer prices - Percentage change on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2011년 1~8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월평균 값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실업률은 데이터 미발표로 1~6월 또는 1~7월의 월평균 값을 이용.

2) 27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한국이 해당. OECD의 나머지 6개 회원국은 데이터의 미비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2. 경제고통지수 상승의 원인 및 전망

- (글로벌 요인) 2011년 경제고통지수 상승의 한 가지 원인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세 회복 미흡에 따른 고용 불안, 高원자재가 지속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 등을 들 수 있음
- (성장력 저하에 따른 고용 불안) 2009년 이후 세계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 약화 현상이 2011년까지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OECD 27개국 평균 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09년 이후 8% 이상을 유지
 - 한국의 실업률도 2011년 1/4분기까지만 해도 4%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고용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지속하여 8월 현재 실업률은 3%로 하락
- (高원자재가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 2011년에 들어 주요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2010년 대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 2011년 9월말 현재 로이터상품지수와 두바이유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 및 31% 상승해 있는 수준

< 주요 선진국 실업률 >

	2008	2009	2010	2011
프랑스	7.8	9.5	9.8	9.8
독일	7.6	7.7	7.1	6.2
그리스	7.7	9.5	12.6	15.9
아일랜드	6.3	11.8	13.7	14.4
이탈리아	6.8	7.8	8.4	8.0
일본	4.0	5.1	5.1	4.7
한국	3.2	3.6	3.7	3.6
포르투갈	8.5	10.6	12.0	12.4
스페인	11.4	18.0	20.1	20.8
미국	5.8	9.3	9.6	9.0
OECD 27국	6.1	8.0	8.6	8.5

<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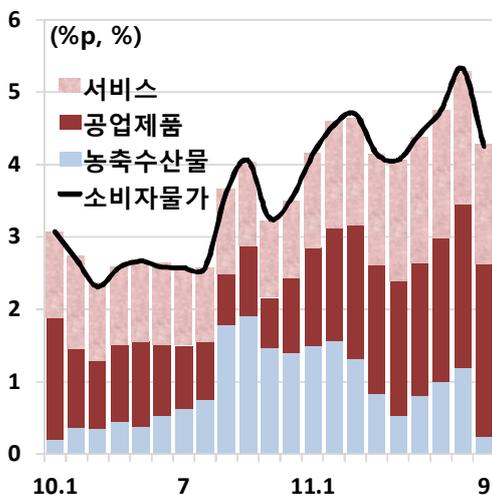


자료: OECD, 페트로넷, 한국은행.

주: 2011년 실업률은 1~8월까지의 실업률의 월평균 값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 미발표로 1~6월 또는 1~7월의 월평균 값을 이용.

- (국내 요인) 국내적으로는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
 - 최근 한국의 고통지수 급증은 고용 요인보다는 대부분 물가 상승 요인에 의해 발생
 - 2011년 들어 국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이상 기후에 의한 농산물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업 제품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데에 기인
 - 이상 기후에 의한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9월 평균 11%대를 상회
 -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 국내 1차산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도 2011년 1월 4.3%에서 9월 7.7%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점증
 - 한편, 심리적 인플레이 요인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점도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
 -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011년에 들어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9월 현재 4.3%를 기록

< 품목별 소비자물가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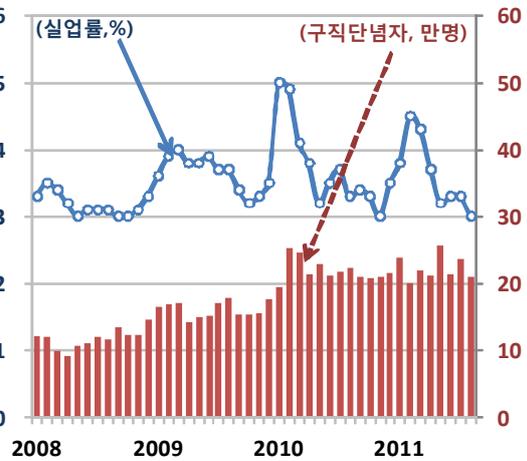
- (전망) 한국의 경제고통지수는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계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부진과 환율 상승에 따른 고물가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우려가 존재
 - 유럽발 위기가 진정되어 세계 경제 상황이 개선 추세를 보일 경우 국내 고용 및 물가 안정이 예상되어 고통지수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2년 경제 전망³⁾에서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는 2011년 7.8%에서 2012년 7.1%로 하락할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3.5%, 실업률 3.6%)
 - 그러나 유럽발 위기가 심화될 경우 환율 급등에 의한 물가 불안과 이어지는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고용 상황도 악화되어 고통지수의 급등이 예상
 - (물가 불안 지속 우려) 고물가 지속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과 환율 급등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 중국의 인플레이 수출 등의 물가 불안 요인들이 상존
 - 2011년 9월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률이 양(陽, +)으로 전환되면서 환율이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
 - 한편 아직 중국 제품의 수출 물가가 추세적으로 크게 높아지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으나,
 - 향후 중국 내부의 지가, 임금 상승 등에 의한 생산 비용 증가, 위안화 절상 등으로 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로 인플레이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존재
 - (고용 악화 가능성 상존)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국내 수출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再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공식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나 구직단념자의 급증, 청년 실업 문제 지속 등으로 고용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3) 현대경제연구원 (2011. 9. 15.) "2012년 국내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경제주평 11-32 (통권 459호) 참조.

< 원/달러 환율 및 변동률 >



< 실업률 및 구직단념자수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시사점

첫째, 국내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미시적 대응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경제 불확실성으로 거시적 물가 안정 수단인 금리 정책은 중립적 기조가 불가피하여, 향후 물가 정책은 미시적 수단 위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시 요금의 세분화 및 소액화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억제
- 농산물 유통 체계 관리·감독 강화, 물류 부문의 유류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물류·유통 비용이 과도하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

둘째, 관세 인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통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입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선별적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 물가 안정에 주력

- 향후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 자제하고 감독 및 규제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 억제에 주력하는 우회적 시장 개입이 요구
 - 특히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요 경화국가들과의 스왑 등을 통한 외환보유고의 확충 노력도 병행

셋째, 국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의한 고용 시장 악화에 대비하여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2012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4% 내외로 경제 내 일자리 수요에 공급이 충분히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향후 재정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을 보다 확대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넷째, 경기 변동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실질 구매력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근로와 같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
- 또한 저소득 계층의 소비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확대 등과 같은 구매력 보전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